

“고용 유지·창출” 강조한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

홍남기 부총리 ‘경제 중대본’ 지휘

靑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 큰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기간산업에 40조원의 안정자금... “반드시 지킬 것”
고용 유지 상응 의무 부과... 고용사각지대 보호책도

방역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꺼내든 것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40조원 규모의 안정자금 긴급 조성을 통해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조치를 통해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10조원도 별도 투입한다.

정책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부족한 고용 창출 여력을 메꾸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 제시된 대책들은 ‘일자리 지키기’라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는 결국 일자리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단순

한 안정자금 40조원도 일시적 자금 지원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해당 기업들에 대해 ‘고용 유지’라는 상응 의무도 부과했다. 기업 도산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생명이 걸린다고 고용 안정을 일깨워준다는 뜻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가 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융 대책도 제시했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발표된 100조원의 금융 조치에서 35조원을 추가해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뜻에서다.
이와 별도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투입해 고용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 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를 감안하여 대응적인 합의를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투입해 고용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도, 자동차부품 다각화 사업 추진

2022년까지 33억원 투입

전북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부품 다각화 및 신시장 창출 지원 사업’(이하 ‘다각화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현대 전주공장 등 완성차 기업의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특정 완성차 업체에 의존하는 단일 수요 납품체제로 조성된 지역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도 생산이 중단되는 등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2월에 중국에서 공급받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었고 도내 자동차 기업 27개사에서 크고 작은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도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다각화 사업에 2022년까지 3년간 33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체계를 개선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동력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다각화 사업은 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제품분석 및 개발 지원(7건), 제품 공정효율화 개발지원(8건), 자동차 신시장 창출(3건)을 지원한다.
/김진성 기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 20대 국회서 처리되나

오늘 국회서 n번방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정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n번방 제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과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5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형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제발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백혜련 단장은 지난 20일 미성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형법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텔레그램 n번방 제발방지 3법 처리를 꼽은 바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22일 입장문을 내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앞서 조정은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에 있어서 정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맘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7 홈페이지 www.imsilin.kr